

# 화물운송업체 대표, 업계 관계자 고소…“허가증 이중등록·불법 증차”

고소인 엄정 수사 및 처벌 호소  
불법 양도, 중복등록 조직의혹  
허가증 양도 ‘이중등록’ 논란  
쌍둥이 넘버…불법 증차 실태  
사문서 위조·사기 등 다중 혐의

전북 군산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운영해온 J씨가 동종 업계 인사 C씨를 불법 증차와 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신규 영업용 허가가 2004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영업용 번호와 허가증 거래를 둘러싼 불법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11일 한국교통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J씨는 소장에서 “법인 차량과 허가증의

양도 과정에서 조직적인 불법과 편법이 자행됐다”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2019년 초 업계 동료 L씨의 소개로 C씨를 만나 사건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J씨는 본인 소유의 ㉸OO특수운수와 OO물류(株)를 C씨에게 넘기고, 대신 C씨로부터 영업용 화물차량 100대를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대금은 12억 원 규모로, 매월 분할 지급 조건이 명시됐다.

그러나 계약 이행은 시작부터 어긋났다. J씨는 “계약 종료일이 지나도 차량 양도가 이뤄지지 않았고, S운수 등 관련 법인의 대표자 변경 등기 역시 약속 시점에 맞춰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C씨가 양도받은 법인 명의와 차량 일부를 제3자에게 되팔려다 적발돼 경찰에 송치된 사건도 있었다는 게 J씨의 설명이다.

문제의 핵심은 ‘불법 증차’ 수법이다. 2004년 이후 신규 운송사업 허가가 끊기면서 영업용 번호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틈을 C씨가 악용했다는 게 고소인의 주장이다. C씨는 본점과 지점 간 차량 배치 변경 과정에서 관할청의 허술한 확인 절차를 파고들었다. 예비허가서와 대폐차 수리 통보서를 위조·변조해 이미 말소 처리돼야 할 차량 번호를 다시 등록하는, 이른바 ‘이중 등록’ 방식으로 허가 대수를 늘린 것으로 지적됐다.

구체적으로는 광주지점 차량 6대를 군산지점으로 전환 등록하면서 정상 절차대로라면 말소돼야 할 광주 차량 번호를 협회 발급 대폐차 통보서를 조작해 재차 등록, 불법 증차 효과를 얻는 식이다.

J씨는 “화물협회와 차량등록사업소가 제출된 서류만으로 재등록을 인가

해준 허점을 노린 것”이라며 제도적 허술함을 꼬집었다. 고소장에는 이밖에도 차량 변경허가와 대폐차 통보 문서 위조, 공정증서 작성 시 허위 기재, 그 공정증서 행사, 사기 등 다양한 범죄 혐의가 적시됐다.

J씨는 특히 C씨가 이중 등록된 영업용 번호를 지입차주에게 정상 등록인 것처럼 속이고 권리금 성격의 ‘T/O’ 비용 300만~500만 원을 받으며 등록을 알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통해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려 한 정황도 고발했다.

고소인 측은 이번 수법이 경험이 부족한 위장차 차주, 관련 법령 이해가 부족한 영업주들 대상으로 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불법 번호를 정상 등록처럼 꾸며 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

공기관에 신고하며 각종 지원금까지 챙겼다는 설명이다. J씨는 “명백한 사기이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계약서 원본, 법인 등기부, 변경허가 증서 등 다수의 증거를 소지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할청과 한국화물협회, 경찰청 등에 별도 수사를 요청했고, 유가보조금 불법 수령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환수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파장도 상당하다. 고소인은 C씨의 불법 행위가 본인과 회사에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강하게 안겨줄 뿐 아니라, 후속 행정처분이 강화되면 지입차주 등 무고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피고소인은 이미 불법 매매와 문서위조 혐의로 송치된 전력이 있

어 사건의 중대성이 더욱 크다. 이번에는 반드시 철저한 조사와 사법 처리를 통해 업계 불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고소장에 기재된 계약 및 금융거래 자료, 차량 등록과 변경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사건의 실제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수사 관계자는 “자료 검증과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피고소인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는 추후 일정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에 만연해온 음성적 번호 거래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단속과 제도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와 제도 개선 논의에 관심이 집중된다. /고홍석기자

## 전남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온힘

노인·농기계 사고사망자 증가  
시군협력 맞춤형 대책추진

전라남도는 민선 7~8기 동안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가까이 줄였으나,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2017년 373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4년 192명으로 48.5% 감소하고, 사고 건수도 16.3% 줄었다. 2019년부터 2천703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노인 교통안전 강화, 시설 보강, 의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한 장기적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2025년 8월 말 현재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8건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오히려 132명으로 11명(9.1%) 증가했다.

전체 사망자의 64%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농기계 사고 사망자는 4명에서 16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중 단독 사고는 9명으로, 운전·조작 미숙으로 배수로나 논밭에 추락·전도됐으며, 7명은 차량이 농기계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숨졌다.

전남도는 올해 증가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군과 협력해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가을 행락철을 맞아 도민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민·관·경이 참여하는 시군별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교통안전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남도 안전학당도 1만 8천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 운영하며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교통안전 포스터를 전남지역 모든 경로당에 부착해 생활 속 안전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를 이륜차까지 확대하고, 노인 사망자가 많거나 급증한 지역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선 연말까지 농기계 현장 안전 교육을 이어가고, 교육 참여가 어려운 고령 농업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병행한다.

오는 10월 23일부터 7일간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에선 농촌진흥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농기계 교통안전 체험관을 운영해 농업인들이 보호장구 착용, 시뮬레이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2026년부터 농기계 후면 조명등 보급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지원 등 교통사고 예방 장치 확대를 검토하고, 국도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가까이 줄이며 가시적 성과를 냈지만, 올해 다시 늘어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창덕기자

## GGM 노사, 폭행·업무방해 쌍방 고소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지회장을 폭행한 혐의로 등용현 대표이사과 임직원 8명을 광주 관성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22일 공장 내 대표이사실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선전 활동을 하던 중 대치하던 사측 관계자들이 강제로 현수막을 빼앗고 노조 간부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가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사측이 배포한 것을 두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조의

쟁위행위를 사측이 방해했다”며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당국에도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GGM 노조는 지난달 22일 대출금 조기 상환 논란에 대해 사측을 규탄하는 선전 활동을 하다 저지하는 사측 관계자들과 밀고 밀치는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지회장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노조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혼자 스스로 넘어지며 연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선전전에 참여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2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고홍석기자



6공구 백림약국 삼거리

/광주시

##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도로 개방률 56%

상무역 주변 등 예정대로 개방  
구간별 안전점검 안전 최우선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시청~광주역) 건설공사와 관련, 공사구간 도로 개방이 8월말 현재 56%를 달성하는 등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개방 공정에 속도를 내 오는 12월22일까지 백운광장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의 도로를 전면

개방해 교통흐름을 정상화 한다는 목표다. 실제 지난 7월말 기준 도로 개방률은 6.3km, 43%에 머물렀으나, 상무역 주변 등 3곳 1.8km구간의 도로 포장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완료, 8월말 현재 8.1km, 56%까지 향상됐다.

특히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경기장과 숙소 등 선수단이 오가는 도시철도2호선 공사 구간(1.4km) 중 급화도 800m 구간은 복공판을 철거하고 8월말 정상 개방했다. 다만, 양궁장 앞 600m 구간은 7월 극한호우로 인해 되메우기 공정이 늦어져 도로 개방이 지

연돼 11월 말 개방 예정이다. 광주시는 선수단 수송 도시철도 공사 구간에 대해 선수단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과 세계양궁대회 손님맞이 환경 개선 차원에서 도로점용 구간의 울타리(펜스) 전면 철거 및 복공판 도색 등을 통해 미관을 개선하고 시각적 안정감을 높였다.

또 소음을 줄이기 위해 낮은 복공판을 교체하는 등 보수 작업을 병행하고, 복공판 단차를 없애기 위해 도로 덧씌우기를 실시하는 등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특히, 도

로 개방 전 구간별로 안전점검과 도로 포장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하고 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임시 중앙분리대 설치, 차선 도색,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추진 중이다.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 대중교통 전환의 핵심 사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크다”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도로를 개방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시민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고홍석기자

## 중노위 “신성자동차 조합원 당직 배제, 부당노동행위 판정”

중노위 “노조 배제는 위법” 판단  
단체교섭 회피 정당 사유 안 돼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당직 업무에서 배제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준 신성자동차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사용자 측의 인사 운영 방식과 단체교섭 태도에 대한 중노위의 해석을 분명히 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열린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에서 신성자동차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부당노동

행위로 인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신성자동차가 노조 조기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세 차례 업무 회의에서 배제하고, 이후 단체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금속노조는 이러한 조치를 두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초심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이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면서 판정은 중노위로 넘어갔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노동조합 조끼 착용은 쟁의행위의 일환이자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며 “이를 이유로 조합원들을 회의에서 퇴장시킨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을 제약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업무 사정이

나 내부 일정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교섭 의무 위반을 지적했다.

이 같은 판단은 기업이 경영상 이유를 들어 교섭을 회피하거나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조치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노동법 해석의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정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거부 논란이나 노조 활동 제약 문제에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 측은 이번 결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중노위의 판정을 계기로 특수고용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들이

더욱 당당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측은 조합원 배제 조치를 철회하고 판정에 따른 구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회사 측은 아직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후속 절차를 어떻게 이행할지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인사 운영과 교섭 절차에서 조합원 배제 문제가 지적된 만큼, 노사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정을 계기로 신성자동차 내부에서 조합원들의 활동 보장과 단체교섭 과정의 정상화 여부가 주목된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 노동 현장에서의 파급 효과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창덕기자